【 2017.4.21(금) 강원일보 】

화전 건설 허가로 5천680억 투자 합의

〈火電〉

이슈현장 해역이용협의 협약 체결

삼척시와 포스파워(주)가 20일 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한 맹방해변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조건부 협약을 체결했다. 화력발전소 인허가권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쥐고 있지만, 해양수산부가 해역이용협의에 대한 협의권을 지자체에 일임함으로써 오랜 논란 끝에 시가 이같이 결정했다.

◇김양호 삼척시장과 윤동준 포스코에너지 대표, 윤태주 포스파워 대표 등이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맹방해변 해역이용협의에 대해 조건부 협약을 체결했다.

삼척시, 포스파워에 이행각서·공증 얻어내
김양호 시장 "조건부 협의 원만한 진행 기대"
반대 단체 "주민의사 무시 … 강력 대응할 것"

■ **협약 내용**=포스파워(주)는 이번 협약을 통해 5,680억원 규모의 직간접 투자 사업을 제시했다.

지역협력사업 630억원을 비롯해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에 1,100억원, 맹방관광사업에 95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풍력 590억원과 태양광 40억원, 온배수열발전소 170억원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800억원을, 미래에너지산업 분야에 1,800억원과 사원용 주택 건립 400억원 등 간접투자 계획도 밝혔다.

특히 협의 과정에서 시가 이행각서와 보증증권, 공증절차 등을 요구했고, 포스파워 내부에서는 '사업을 포기하자'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양측이 신뢰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더해져 합의를 도출하는 결과를 냈다.

김양호 시장은 이와 관련, "찬반 의견과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고심 끝에 조건부 협의를 하게 됐다"며 "이행각서를 토대로 삼척시가 요구한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동준 (주)포스코에너지 대표는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할 생각이며, 새 정부에 기업의 입장과 대안 마련 등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찬반 논란 가열**=이날 협약이 체결되자, 건설반대 범시민연대 이용우 사무총장은 "주민 의사를 무시한 결정으로 시의 입장에 앞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며 "청정환경을 지키기 위해 주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날 오후 5시 포스파워 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해변침식과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반면 화력발전소 범시민유치위 김상찬 회장은 "환경저감 대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직간접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의 주민들을 설득해 상생 발전하는 기업의 자세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삼척시 적노동 구 동양시멘트 폐광산 부지에 2,000㎿ 규모의 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포스파워는 6월 말로 예정된 정부 인허가 절차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반대 주민들을 설득하는 과제를 두고 있다. 삼척=황만진기자

【 2017.4.21(금) 강원도민일보 】

원주-강릉철 입찰 담합 혐의 4개사 공정위 적발 700억대 과징금 부과

현대건설,한진중공업,두산중공업,KCC건설 등 4개사가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7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입찰에서 서로 나눠먹기 담합을 한 이들 4개 대형 건설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건설사별 과징금은 현대건설 216억 9100만원,한진중공업 160억6800만원,두산중공업 161억100만원,KCC건설 163억3000만원 등이다.

이들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3년 1월 발주한 9300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철도 노반공사 4개 공구(2공구,3-1공구,3-2공구,4공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고 담합을 실행해 각각 1개 공구씩 낙찰받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또 이들은 투찰 전달 공구별 낙찰사와 투찰금액을 결정하고 입찰에 필요한 서류를 공동작성,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기섭

【 2017.4.21(금) 건설경제 】

춘천 레고랜드 마침내 첫삽

시공사 선정과 문화재 발굴 여파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조감도) 조성 공사가 본격화된다. 공사 착공 이후 공사대금 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넘어야 할 난관이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강원도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에서 추진되는 레고랜드 테마파크 조성 공사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지난 14일 사업 시행자인 엘엘개발과 대림산업이 1500억원 규모의 레고랜드 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에 첫삽을 뜨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5011억원인 레고랜드사업은 2011년 투자 유치 발표 당시 2015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다. 2014년과 지난해 2차례 착공식을 열었지만 사업지에서 문화재가 발굴되고, 시행사 전 대표가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다.

지난해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시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본계약이 차일피일 미뤄졌다. 최근에는 두산건설로 시공사를 교체하려다 공사비 지급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계획이 틀어지기도 했다.

이번에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면서 큰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책임준공 약정을 제공했고, 공사비도 착공 6개월 이후 받기로 하면서 당분간 공사 진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사 전 대표 횡령 등으로 사업 속도못내다 오늘 착공

공사대금은 착공 이후 마련 道 "2019년 1월 개장 가능" 주변 기반시설 조성도 속도

도는 레고랜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오는 2019년 1월에 레고랜드가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기반시설 조성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7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진입교량은 핵심공정인 원형주탑이 지난 2월에 완공되면서 올해 10월 준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아울러 상·하수도관로와 전기, 가스, 통신 등의 기반시설 설치공사가 이번달 착공에 들어갔다.

다만 시행사가 공사비를 레고랜드 테마파크 주변 부지를 매각해 마련할 계획이어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는 주변 도유지 등을 올해 상반기 내에 매각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매각 대상에 국유지 등 여러 성격의 토지가 섞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도 관계자는 "전체적인 매각 계획은 시행사에서 세우고 있다"면서 "도유지 매각은 상반기 중에 완료할 계획이며, 토지 매각 자체가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

【 2017.4.21(금) 건설경제 】

'공원 해제위기' 속초 영랑근린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정비한다

태원건설, 우선협상자로 선정

강원 속초시가 공원조성을 못한 채 일몰제 적용을 받아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인 영랑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으로 정비하기로 하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20일 속초시에 따르면 영랑호 서쪽, 금호동 산 278번지 일대에 있는 면적 14만 5591㎡의 영랑근린공원은 지난 1964년 7월 공원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을 받는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공원구역에서 해제되면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잇따를 예정이어서 난개발 우려와 함께 공원으로 개발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영랑근린공원 구역에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지난 19일 종합건설업체인 태원건설산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공원 민간조성 특례제도'에 따라 사업제안자가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인 공원용지를 사들여 이 가운데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미만은 수익사업을 위한 비공원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재 전국 25개 자치단체, 73개소에서 사업이 진행 중이다.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태원건설은 비공원 시설로 1200여가구의 공동주택 건설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속초시는 제안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정성 검증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용 여부를 협상 기간 안에 결정해 제안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다.

속초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원의 체계적인 개발은 물론 일몰제 이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막고 도로 등 공원 내 기반시설 조성도 사업자가 해야 하는 데 따른 자치단체의 재정적 이득도 있다"며 "시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협상을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속초시 전체 공원구역 면적은 88만 3000㎡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 공원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방치되다시피 하는 장기 미집행공원은 42만2000㎡에 이르고 있다.

〈강원~충청~호남〉

"국토 균형발전위해 강호축 개발 필요"

강원·충북·전남, 대선공약 반영 요구

강원·충북·전남도가 공동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 염원을 담아 '국가 X축' 실현을 위한 '강호축(강원~충청~호남)' 구축 대선공약 반영 건의문을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제2의 도약을 하려면 국토 균형개발이 우선이고, 그 핵심 과제가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한 강원~충청~호남을 잇는 강호축 개발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난 반세기 경제발전에 이바지한 경부축(서울~대전~대구~부산)과 더불어 이제는 강호축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 신 성장축을 설정하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 국가 균형발전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호축으로 고속교통망인 국가 X축을 구축해 진정한 국토 균형발전을 실현함으로써 중앙아시아 및 유라시아 진출에 대비해 달라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 헬스케어·관광(강원), 바이오의약·화장품(충북), 에너지신산업·드론(전남) 등 강호축 전략산업 육성도 건의했다.

백두대간권, 영산강유역,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을 연계한 미래 선진국형 관광·힐링·휴양 벨트 조성 등 미래과제 산업 육성도 세부 추진과제에 포함했다.

최문순 강원지사, 이시종 충북지사, 이낙연 전남지사는 지난 19일 5개 정당 대표와 대선 후보 등에 건의문을 전달했으며, 강호축에 새로운 교통·관광·산업축이 구축돼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경제성장 원동력이 되도록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